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0호

천안함사건과 코리아연구원의 정책제언

기획 취지

정부는 천안함 사고 후 5/24 대통령 담화 및 후속조치를 통해 6 2지 자체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북한 또한 초강경 대응하면서 국지전 및 전쟁 발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은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분석하고, 미·일·중·러의 대응을 평가하며,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 [1]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6/9, pp. 1~10.>
- [2] 천안함 국면 이후를 내다보는 미국의 행보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6/8, pp. 11~16.>
- [3] 천안함 사태와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의 진로 (코리아연구원) <6/17, pp. 17~22.>
- [4]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김재관,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6/18, pp. 23~32>
- [5] 천안함 사태와 러시아의 정책 대응 분석 및 전망 (유진숙,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6/15, pp. 33~36.>
- [6] 천안함 사건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코리아연구원) <6/25, pp. 37~41.>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I.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소되지 않은 솔한 의문점들
- II. 조급하고 미숙한 천안함 외교가 부딪힌 난관
- III. 연어급 잠수정 과연 있나?
- IV. YONO? 연어(salmon)를 말하는가? 예언자 요나(Jonah)를 말하는가?
- V. 소위 '연어급 잠수정' 은 북한의 유고급/P-4급 잠수정과 다른 것인가?
- VI. 2009년 헤리티지 재단, 북한 공격형 잠수함 개수 '0개' 로 분석
- VII. 0.00001% 가능성도 과하다.

지난 5월 20일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내외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 수중 6-9m 수심에서 일어난 근접 비접촉 어뢰 폭발에 의해 침몰되었고, 북한의 연어급(130톤급) 잠수정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CHT-02D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주도 조사단이 제시한 여러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솔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의 항적이나 당시 교신 내용, 생존자들의 진술 등의 기초정보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사실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민군 합동 나아가 국제합동조사라는 것도 사실상 한국군 주도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민간이나 해외조사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했다고 말하기 충분치 않다¹⁾. 심지어 최종 발표 내용이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과 다르거나 번복된 부분이 많아서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I. 천안함 조사결과발표로 해소되지 않은 솔한 의문점들

예를 들어 1)어뢰 폭발로 인한 물기둥은 과연 있었나? 당초 물기둥이 없었다던 군의 발표는 왜 번복되었나? 2)생존자나 사망자에게서 어뢰폭발에 상응하는 상처가 왜 발견되지 않나? 3)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4)절단면과 선체 바닥, 선체내부에서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없는 것 아닌가? 5)가스터빈실 인양 사실 왜 민간업체 체보 이후에야 공개했나? 그리고 가스터빈실 조사 없이 왜 선거 개시일에 맞추어 서둘러 최종결과를 발표했나? 6)연어급 잠수함 과연 존재하나? 어떻게 침투했나? 7)초계함, 링스헬기, P3C 대잠초계기, 이지스함으로도 잠수정 침투와 귀환, 어뢰 발사 중 어느 것 하나도 추적하지 못했단 말인가? 등의 의문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군이 제시한 이른바 ‘결정적 증거들’ 자체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첫째, ‘1번’ 이라고 쓰인 유성매직 글씨는 북한이 수출품 어뢰에 유성페인트로 부품번호를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최소 300도 이상의 폭발에도 불구하고 멀쩡한가?” 하는 질문³⁾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과연 폭발의 흔적인가?, 어뢰나 선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산화물은 과연 폭발에 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미 버지니아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이승현의 주장에 따르면, 민군합동조사단이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제시한 어뢰와 선체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산화물은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흰색 분말이 단순히 알루미늄 녹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론에 국방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은 설득력 있는 과학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지난 주말 3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가 장문의 리포트를 발표하여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합동조사단 해체 △군 지휘라인 전원 수사 착수 △국정조사 즉각 실시 △증인 접촉 보장 △국내외 조사위원 신원공개 및 접촉 보장 △항적·교신 정보 전면 공개 △언론 기능 회복·탐사보도 확대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II. 조급하고 미숙한 천안함 외교가 부딪힌 난관

충분한 증거 없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세력을 북한으로 단정하여, 서둘러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도 점점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이번 주부터는 안보리 상임 비상임 이사국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방한일정을 끝낸 러시아 조사단은 군의 천안함 조사결과 설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외신의 보도다. 경향신문은 홍콩 봉황위성TV를 인용하여, 러시아 전문가팀이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났음에도 어뢰 부품이 온전한 이유, ‘1번’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는 이유 등에 의문을 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 조사단은 당시 서해 연안에는 ‘미 핵잠수함’도 있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왜 초계함을 목표로 삼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봉황위성 TV는 전했다고 한다. 중국 역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이 동참하는 4자 진상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안보리에서의 협조를 얻기 힘들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불리한 소식은 미국으로부터도 날아들었다. 미군측은 당초 이번 주 한국군과 함께 서해상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무력시위와 대잠훈련을 축소하고 2-3주 뒤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까지 이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홍보했었다. 국방부는 여전히 축소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등을 의식한 탓인지 미국의 행보가 이명박 정부의 예상만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 뿐만 아니다. 최근 AP 통신은 “당일 오후 9시까지 백령도와 75마일(약 120Km) 거리의 해역에서는 한미 대잠수함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 구축함 2척과 다른 함정들이 한국 잠수함이 표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추적 훈련을 벌이던 중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훈련을 중단했다.”는 놀라운 얘기도 주한미군 대변인 제인 크라이튼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한미연합군이 대잠 작전훈련을 75마일 밖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중단했고, 천안함이 군의 주장대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한미의 모든 대잠능력이 북의 잠수정을 추적하는데 활용되었을 터이다. 그런데도 군의 발표에 따르면 북의 잠수정은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AP의 기사는 비록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제 아래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 특히 북한 잠수정의 침투와 어뢰발사를 한미 양측이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 미국 기자들에게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Ⅲ. 연어급 잠수정 과연 있나?

지난 주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던 쟁점의 하나는 이른바 ‘연어급’ 잠수정에 관한 것이었다. 연어급 잠수함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주 국방부와 송영선 의원실 등의 ‘위성사진’ 공개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아 있어 이 지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연어급’ 잠수함은 이제까지 군이 공식 비공식 발표자료에서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기종이라, 당시 무기 전문가들마저도 의아해 했었다.

남측의 발표에 북한 국방위원회 박림수 정책국장은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t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송영선 의원실이 연어급 잠수함이라면서 위성사진 등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재반박을 위한 것이었다. 합조단은 5월 30일 배포한 ‘북의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지난 2005년 미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동 서해 해군기지에서 130t급 잠수정을 식별, '연어급'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밝혔다. '상어급' '유고급' 등 북 잠수함(정) 명칭은 한미 정보당국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북한에선 이와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도 비파곳 기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해 연어급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제시했다.

상어급 잠수정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옹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북한이 스스로 상어급이라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사회에 영어로 ‘Sang-O class’라고 명명된 북한제 잠수함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통상 무기 보유국이 장비 명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동종의 장비에 대해 ‘***급’ 장비라고 명명하는 사례는 흔하다. 특히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권이 보유한 장비의 북한 자체 명칭과 외부세계(주로 NATO)의 호칭(별명)이 다른 사례는 많다⁴⁾. 북한이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린 물체를 북한 스스로는 광명성 2호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NATO는 대포동급 미사일이라고 명명하는 판국이니까?

하지만 해당국가에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 외부에서 ‘***급’이라는 별명(호칭)을 부여하는 예는 없다. 게다가 장비의 존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확한 명칭조차도 불투명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연어급 잠수정이 바로 그 짝이다.

연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almon이다. 하지만 상어급을 Shark class라고 번역하지 않고 Sang-0 class라고 명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어급 잠수정은 영어로 Salmon급⁵⁾이 아니라 Yon-0급 혹은 Yeon-0급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 실제로 국방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최초로 연어급에 대해 언급할 때 영문 명칭을 상어급(Sang-0)의 표기방식과 마찬가지로 ‘Yon-0’ 급이라고 하이픈(-)을 써서 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설명을 통해 국방부는 마치 북한이 보유한 새 잠수정에 관한 정보를 남한 측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 신형 잠수정에 대한 명명작업을 남한 측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누렸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어뢰부품에 1번이라는 한국말을 표기할 나라가 누구겠냐고 반문했던 것을 패러디한다면, 연어라는 한글 물고기 명칭을 부여할 나라 역시 뻔한 것이고 그 대상은 북한에서 운용되는 것이 확인된 신종 잠수정일 터이다. 국방부 장관은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직후 국회에서 2005년 이래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국방부 설명자료는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설명이 2009년 Janes 연감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부연하기까지 했다.

IV. YONO? 연어(salmon)를 말하는가? 예언자 요나(Jonah)를 말하는가?

그런데,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잠수함 명칭 중 북한제 ‘연어급(Yon-0급)’이라고 명명된 잠수정은 없다. 정말 없나? 필자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없다. 2009년 Janes 연감에도 북한의 연어(Yon-0 혹은 Yeon-0)급 잠수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YONO(IS-120) class(Iran)’ 잠수정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다. YONO급이란 이란의 120톤급 소형 잠수정을 일컫는 것으로, Gahdir라는 명칭의 잠수정도 이 기종 중 하나로 밝혀져 있어 가디르(Ghadir)급이라고도 불리운다⁶⁾. 요노(YONO)급, 혹은 Ghadir급 잠수정은 2007년 이란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2007년 식별된 이란의 요노(YONO)급 잠수정은 존재하는데 2005년에 한미가 위성사진을 통해 공동으로 식별해 명명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기록은 왜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군은 이란의 YONO급 잠수정이 곧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YONO가 연어의 영문표기인지는 불명확하다. 상어(Sang-0)

급을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명명했고 연어급도 한미가 공동으로 명명했는데 물고기를 지칭하는 한국어 표기는 왜 다른가? 한미 정보당국이 하이픈(-)을 적어 넣는 것을 잊은 것인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만약 YONO가 연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YONO라는 이란 말은 없는 것일까? 있다! YONO는 이슬람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姓)씨의 하나이다. 더욱이 YONO는 성경과 쿠란에 동시에 언급되는 예언자 요나(Jonah)의 페르시아식 명칭이다. 이슬람권에서 예언자 요나(Jonah)는 YUNUS, YOUNOS, 혹은 YONO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형 잠수정의 명칭인 YONO가 요나를 의미한다고 간주하고 이란 중형 잠수함의 별칭인 'Nahang(고래)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서로가 아주 잘 어울린다. 예언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는 중동과 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유명하다. 게다가 YONO가 '뚱뚱하고 둥글다'는 비속어로도 사용되는 만큼, 앞이 뚱뚱하고 통통한 120톤의 Gahdir급 소형 잠수함 별명으로서도 안성맞춤이다.

만약 잠수정의 명칭(별명)이 ‘연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당연하게도 한미가 위성사진을 통해 공동으로 식별하여 130톤급 신형 북한 잠수정을 연어급이라고 명명했다는 주장은 사실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다. 이는 1)북한에서 이미 운영 중이고, 2)연어급으로 명명되어 국제사회에 알려진 신종 잠수정이 3)이란으로 수출되어, 4)이란에서 제조된 같은 급의 잠수정에도 ‘연어’라는 물고기 이름을 남겼다는 군의 설명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이는 마치 모친에선 연어로 이름 붙여진 연어가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 페르시아만에 도달해 예언자 요나로 환생한 것과 같다. 게다가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 안보 관련 싱크탱크나 관련 문서들조차도 북한의 ‘연어’를 기억해주지 않고 이란의 ‘요나’만 기억하고 호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 추정이 불행하게도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무책임한 임기응변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V. 소위 ‘연어급 잠수정’은 북한의 유고급/P-4급 잠수정과 다른 것인가?

북한이 1991년, 그리고 2003년경 유고급(YUGO급) 잠수정을 이란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기록은 몇몇 해외보고서에서 발견된다. 일부 해외 문헌들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잠수정을 들여와 상어급(35m 내외, 300톤 내외), P-4급(29m 내

외, 190톤 내외)잠수정, 그리고 YUGO급으로 알려진 20m 내외 80톤 소형 잠수정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시큐리티 같은 안보전문 사이트들도 YUGO 급과 P-4급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P-4급의 길이는 29m로 YONO급으로 알려진 이란 잠수정의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것은 YUGO급으로 통용되는 P-4급 잠수정일 수 있다.

문제는 상어급도, YUGO급(P-4급도 포함)도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중어뢰를 장착하고 발사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군 스스로도 상어급이나 상어급보다 조금 작은 P-4급 등 구형 잠수정은 주로 침투용으로만 사용되며, 중어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YUGO급(20m 80톤급) 소형 잠수정 역시 비교적 신형이지만, 중어뢰를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천안함을 침몰시킨 공격용 연어급 잠수정이 존재한다면 이들 구형 잠수정과 구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잠수정이 존재했는지, 그 기종이 이란에 수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으로부터 YUGO급 잠수정을 수입한 사례가 있는 이란은 2007년 ‘자체 기술’로 Ghadir라는 이름을 가진 첫 요노(YONO)급 잠수정을 개발했다고 공표했다. 이 잠수정에 대해 몇몇 해외보고서들은 이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고(YUGO)급 잠수정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태리의 오래된 기종인 Sauro급 잠수함의 축소판처럼 보인다는 분석⁷⁾도 있고 다른 이란제 잠수정은 이보다 소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는 요노(YONO)급 잠수정들이 북한 유고(YUGO)급 잠수정의 단순한 복제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란은 이 잠수정이 533mm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고, 소나회피 잠항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요노(YONO)급 잠수정의 구체적 성능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이란은 지난 20년간 잠수함 전력을 증시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방위산업 분야에서 흔히 있는 과장된 홍보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민군합동조사단이나 군은 요노(YONO)급을 자체기술로 개발(혹은 개량)했다는 이란 측의 주장은 배격하는 반면, 북한이 어뢰발사능력과 소나 회피기능을 가진 고성능 연어급 잠수정을 이란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검증 안 된 가설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0년 2월 발행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자료에서도 북한이 지닌 잠수함이 공격용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낡은 기종이며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⁸⁾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에 따

르면 북한의 공격 잠수함(attack submarine)의 개수를 2009년 현재 0개로 추산하고 있다. 적어도 헤리티지 재단은 한미당국이 5년 전부터 식별하고 있었다는 신종 공격형 잠수정인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까지 북한이 이란에 수출했다는 잠수함이 YUGO급이던, P-4급이던, 아니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연어급’ 이던 간에 ‘공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북한 잠수정은 속도가 느리고 영화에 나오는 미국 핵잠수함처럼 잠항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 잠수정에 의한 공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VI. 2009년 헤리티지재단, 북한 공격형 잠수함 개수 ‘0개’ 로 분석

소위 ‘연어급 잠수정’ 을 둘러싼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답으로 국방부는 지난 주 ‘연어급 잠수정’ 의 위성사진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위성사진자료 만으로 공개된 사진이 이란에서 운용한다는 YONO급 신형 잠수정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위성사진 중 평양 근처의 공장에서 수리중인 잠수정의 사진에 대해서는 언론기자들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가 지난 주 금요일 구글어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어급(29m)이라기보다는 상어급(32-34m) 잠수정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군합동조사단 측은 오늘(6월 7일) 이 사진이 그림자로 인해 길어져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사진 속의 잠수함이 P-4잠수정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이 제시한 위성사진 역시 같은 이유에서 연어급이라고 주장하는 신종 잠수정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전장이나 외형만으로는 이란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신형 YONO급(29m) 잠수정인지 북한산 구형 P-4급(29m)인지 구분할 수 없다. 외형은 대동소이하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1)군은 북한제 ‘연어급’ 잠수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음을 입증했는가? 아직은 아니다. Janes 연감을 비롯한 어디에도 북한제 연어(salmon을 의미하는 물고기명 Yon-0 혹은 Yeon-0)급 잠수정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다만 이란에서 개발했다는 YONO(이슬람 예언자 YONO = 성경의 요나라는 뜻으로 추정됨)급 잠수정은 확인된다.

2)군은 북한이 이란에 존재하는 YONO급 신형 잠수정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는가? 아직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운용하는 낡은 기종인 YUGO급 혹은 P-4급을 이란에 수출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냥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3)북한에 이란제 YONO급 잠수정이 지닌 것으로 알려진 중어뢰 발사능력이나 잠항능력, 소나 회피능력을 가진 다른 기종이 있는가?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 미국 자료들조차도 2010년 초까지 이러한 능력을 부인해왔다. 상어급, P-4급, YUGO급 모두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고 소개 자료엔 나와 있으나 침투와 중어뢰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기 힘든 낡은 기종이거나 소형 기종인 것으로 확인되어져 왔다.

4)그렇다면, 이란의 YONO급(Ghadir급) 잠수정이 533mm 어뢰 발사능력이나 장거리 잠항능력, 그리고 소나 회피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는가? 아직은 아니다. YONO급 잠수정을 독자 개발했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이란 측의 주장일 뿐이다.

5)군은 북한이 ‘연어급 잠수정’ 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입증했는가? 아니다. P-4급 잠수정의 사진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와 군은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VII. 0.00001% 가능성도 과하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강연과정에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따져보자. 0.00001%도 믿지 못하겠다는 도올의 비판은 과히 황당한 주장만은 아니다. 천안함 소행이 북한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떠나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실제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0.00001%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군 스스로도 잘 아는 일일 것이다.

존재하는지도 불투명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삼엄한 한미연합전력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서 아군 측 소나에 탐지당하지 않고 어뢰를 발사할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함정의 경계망을 뚫고 안전하게 도주할 가능성을 박선숙 의원은 0.81%로 봤다. 여기에는 천안함 침몰로 비상이 걸린 아군 측 해역을 초계함 소나만이 아니라 링스 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의 대잠능력은 포함되지도 않았으니 후하다면 후한 점수다. 이 잠수정이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을 만날 가능성은 또 어떤가? 소나 성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서해의 물살과 수심은 북측 잠수정에게도 똑같이 어찌면 더 심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이 잠수정이 어뢰 단 한발로 천안함을 침몰시킬 가능성은? 이것만으로도 가능성은 0.01% 단위로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250Kg의 고폭약이 장착된 어뢰를 발사했는데 스크루와 추진체가 통제로 남을 가능성, 부품에 그려진 ‘1번’이라는 유성페인트가 산화되

지 않을 가능성, 그 폭발로 발생했다는 이른바 알루미늄 산화물이 주로 알루미늄 부품에서만 발견될 가능성, 그 어뢰로 인한 100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TOD에 찍히지 않을 가능성, 그 물기둥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견시병에게 물방울만 튀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가? 그 물기둥을 봤다는 백령도 주민이 하나도 없고, 한 두명의 초병이 본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것들을 다 합하면 그 기대치나 가능성이 0.00001%보다도 못할 터인데, 그만큼 못 믿겠다는 주장을 무어 그리 과장된 주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천안함 진상조사는 중립적인 주체에 의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4자(남·북·중·미) 혹은 6자회담 당사국(한·미·일·북·중·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은 우선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조치도 철회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보다 엄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검토하여도 늦지 않다. (2010/06/09)



[각주]

- 1)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15>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905>
- 2)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015>
<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904>
-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10353385&code=990304&area=nnb1
- 4) 이런 작업의 특성상, 한국의 세종대왕함, 미국의 F-15처럼 해당 나라가 장비를 실전에 배치하고 장비명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세계에 운용 중인 장비의 실체가 인식되어 이를 새롭게 명명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동종장비들 중 하나의 명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그 명칭을 사용하여 ***급이라고 명명하게 된다.
- 5) salmon급 잠수함은 '연어급'과는 전혀 다른 잠수함으로 미군이 2차대전에서 사용한 배수량 2000여ton, 길이 95m 내외의 잠수함이다.
- 6) 이란은 2009년 현재 최소한 YONO급 잠수정(120-130톤) 7척과 이보다 좀 더 큰 Nahang급(500톤 내외) 한 척, 그리고 Kilo급(2500-3000톤급) 3척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은 Hormuz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 7)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iran/ghadir.htm>
- 8)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0/02/Submarine-Arms-Race-in-the-Pacific-The-Chinese-Challenge-to-US-Undersea-Supremacy>

천안함 국면 이후를 내다보는 미국의 행보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연구교수)

- I. 전폭적인 한국 지지?
- II. 냉정한 이익 계산
- III. 예상되는 통상·안보 압력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의 천안함 사태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맹국으로서의 도리로 보면 당연해 보인다. 실제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면서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설득에 나서고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 노력에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전폭적인 한국 지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전에 미국은 실제 한국의 천안함 사태 대응에 전적으로 같은 입장일까?

I. 전폭적인 한국 지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가?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군이 구조 수색 작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태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3월 29일 간담회에서 “사고에 제3자가 개입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했고,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도 정레브리핑에서 “선체 자체 이외의 다른 (침몰)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월 2일 방한한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의 연루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때 미국 측은 충분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6자 회담 재개 논의도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추진될 것이라는 것도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4월 16일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외부폭발 가능성을 발표

하자, 다음날 북한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설을 “날조”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 또 합동조사단은 25일 사고 원인을 비공식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6일 한국 국방부는 어뢰탄약으로 추정되는 화약성분을 천안함에서 검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 전개는 남북한 긴장고조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혀졌다. 드디어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제 250kg 중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공격받았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회 일각에서는 일전불사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강경여론도 일어났다. 이때 미국은 대통령, 국무장관 등이 직접 나서 한국의 조사가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5월 28일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발표에 맞춰 한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추락한 한국의 안보 태세를 다잡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초강수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한미동맹이 견고함을 과시하며 오판과 도발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서해상에서 해상합동훈련,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을 통해 동맹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를 극대화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II. 냉정한 이익 계산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겉으로 행동통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에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제재 성명 발표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시작된 날이었다. 이 대화에서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취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을 향해서는 할 만큼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부터, 그리고 사태 발생이 북한의 소행이 원인이라고 판정하면서 대북정책의 이슈를 천안함 사태로 국한하고 정책수단은 제재 일변도로 나아갔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부터 대북정책의 일순위로 삼았던 북핵문제도 뒷전으로 쳐졌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전개하던 부분적인 온건책도 완전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이전에는 6자회담 개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안에 대한 연계에는 반대하였다. 4월 29일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미룬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나는 질문을 받고 “반드시 두 사안을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을 것” 라고 답변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5월 26일 서울을 방문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이 방향을 전환토록 하는 대응책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이 두 가지 트랙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태 이후, 더욱이 그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는 대북정책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두는 집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장관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000’ 의 목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는 오직 대북 제재에 전념하는 대신 미국은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의 주요 관심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안정,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을 동시에 겨냥한 고도의 외교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화려한 연사로 한국정부의 대응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전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논하며 지역안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제재 성명 이후 국방부가 밝힌 서해상 한미합동 대잠 훈련에 참가할 군함과 훈련 시기가 조정되고 있는 점과 대북 비난방송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처음 강도 높게 추진하던 대북제재의 수위가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제재를 지지하면서도 그 수위는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반복보수 진영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

는 여론에 대해서도 미국은 두 사안의 연계를 경계했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5월 10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아프간, 해적 문제 등 글로벌 협력 등 다른 이슈에 대한 공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런 발언은 천안함 사태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합의한 협력 방침이 영향을 받아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가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미 의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대신 미 자동차 수입,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 등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미FTA를 타결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천안함 사태에 한정된 대북제재 일변도의 우리정부의 외교 환경이 북한과의 대결, 중국의 의심, 미국의 국익 챙기기 등으로 녹녹치 않아 보인다.

한편, 북한은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에는 침묵, 4월 16일 이후에는 남한정부 비난에 나서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미국이 한국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마자, 북한 외무성은 5월 21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하고, 북미 간 뉴욕 실무접촉 중단을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강경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그에 앞선 5월 12일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의 제재 움직임을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Ⅲ. 예상되는 통상·안보 압력

천안함 사태에 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 단독, 한국과의 양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 대응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는 일방적 제재는 한국전쟁 기간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개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촘촘하게 취해져왔는데, 2009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2차 핵실험으로 취해진 유엔 안보리의 두 가지 제재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가 취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취하는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 사업 축소 등을 지지하는 한편 서해상 대잠함동훈련 등 군사 시위와 정보 공유 강화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 감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은 이란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중국,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한 형편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잇따른 민간 구호선 나포에 대한 국제사회(중국, 러시아 포함)의 비난이 거센데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는 의장성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내용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 것을 활용하여 또는 그 대가로 다른 사안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점이 미국의 한미FTA 타결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쇠고기 수입개방의 조건 완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이 문제시된 쇠고기 위생 및 검역체계 개선 결과를 보일 경우 타결이 물살을 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일어났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대잠능력 향상과 관련되는 무기 수출 및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토야마 정권이 사퇴하게 된 후텐마 기지 문제도 미국은 자국의 입장(오키나와 내에서의 기지 이전)을 관철시켰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 현지 주민은 물론 아프간 정부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추가 파병을 해준다면 더없는 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직면한 한국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표할 때 내놓은 것이 동맹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동맹국의 의무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아프간 사태의 경우 한국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장래 예상되는 미국의 외교·통상 압력에 면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대북제재 문제로 중국과 외교적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미국은 중국과 G2 협력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 등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 양국 간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천안함 문제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일정한 협의 하에 천안함 관련 상징적인 대북 제재를 추진한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출 수도 있

다. 이를, 한국이 대북제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과 연결해 이해한다면 미국의 실리 추구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수소폭탄 제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국의 대북제재에 손뼉만 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출구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천안함 사태에 함몰되어 있는 사이 미국 등 주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고 있고 북한의 핵보유 능력은 강화되어 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정국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현실성 있는 전략을 갖고 북한을 접근할 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그럴 의향을 분명히 밝혔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교안보정책도 국민의 신뢰가 정책 성공의 토대가 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정책 재검토는 그 출발이 될 것이다. (2010/06/08)



천안함 사태와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의 진로

코리아연구원

- I. 천안함에서 후텐마로
- II. 하토야마 내각의 유사(類似)선택
- III. 간 내각의 출범, 동아시아 구상은 후퇴하나

I. 천안함에서 후텐마로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래, 한국과 일본의 정치일정은 전혀 없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 시작은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화한 지난 5월 20일이었다. 이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한반도가 매우 긴박해 지고 있다”고 즉각적인 소명 발표를 했다. 뒤이어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도 “일본에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입장표명과 더불어 자위대에 독자적 정보수집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오카다 가즈야 외무상이 존 루스 주일미 대사와 함께 그간 일본외교의 최대쟁점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작업의 최종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 내용의 공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로 맞추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가 있던 5월 24일, 하토야마 총리는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북한 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그리고 28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으로 가는 자금의 신고 기준 금액을 종래 1,000만 엔 초과에서 300만 엔 초과로 낮추는 한편, 북한에 갈 경우의 소지 금액의 신고 기준도 30만 엔 초과에서 10만 엔 초과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그간 계류 중에 있던 북한행 선박의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으며,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의 시행을 1년 연장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민주당 정권 등장 이후 보류되어 왔던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일거에 분출한 것이다. 후텐마 문제 관련 미일 공동성명 발표는 이와 패키지를 이루고 있었다. 28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은 오키나와

나하(那覇)시에 있는 미군 기지, 즉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의 미군 슈워브 기지 연안부로 옮긴다는 내용이었다.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외(県外) 이전이라는 하토야마 내각의 공약이 이 시점에서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 편승은 그 다음날에 피크에 이르렀다. 하토야마는 수상은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선도적’으로 천안함 사태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냉정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칭송했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에 의하면, 당시 하토야마 총리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까지 제안할 계획이었다.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구축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 정치의 기묘한 연동은 6월 2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졌다. 투표 직후 한국에서 여당의 참패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의 호외가 발간되었다. 같은 날 하토야마가 중 참의원에서 총리직을 전격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II. 하토야마 내각의 유사(類似)선택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전개되어 온 천안함 사태와 후텐마 문제, 그리고 한국 여당의 참패와 일본 내각의 퇴진 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의 현외 이전은 하토야마 내각의 지향을 상징하는 정치공약이었다. 따라서 이것의 철회는 곧 하토야마 내각의 정체성을 묻는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후텐마 문제와 관련한 미일공동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 여론의 급격한 하락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하토야마는 후텐마 기지 이전의 철회의 이유로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한반도 정세의 긴박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다른 이유들은 거의 거론하지 않을 정도였다. 실제로 후텐마를 비롯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有事)사태를 상징한 것이다. 외형상 천안함 사태의 발생이 후텐마 기지이전 구상을 후퇴시킨 것이 되고, 논리적으로 하토야마 내각을 퇴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후텐마 기지이전 문제의 본질에 보다 접근하게 되면, 천안함 사태와의 관계는 이처럼 단순명료하지 않다.

먼저 하토야마 내각이 당초 후텐마 기지에 주목하게 된 경위를 보자. 민주당은 2002년부터 독자적인 ‘오키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후텐마를 거론해 왔지만, 이것이 최우선 순위의 정책이 된 것은 2009년 정권교체가 현실화되면서 부터이다. 민주당이 내건 메

니페스토에는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에 근거한 ‘신시대 미일동맹’이라는 용어와, 미일지위협정의 개정 및 주일미군기지의 재편이라는 구상이 등장했다. 하토야마는 내각 출범 직후 “미국 영향력의 저하”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일면 급진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민주당 정권의 대미관의 이면에는 사실 중국의 경제 군사 대국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 일본에게는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대외정책의 총론을 미일관계의 재편 그 자체가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로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실행의 첫 단계로서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문제였다. 전술한 대로 후텐마 기지는 북한의 위협을 가정하고 있지만, 오키나와는 지정학적으로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근접해 있는 곳으로 대 중국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에게 후텐마 기지는 미일동맹과 미중관계의 재편을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정책 아젠다로 인식된 것이다.

문제는 그 실천전략이었다. 하토야마 내각은 압박한 미일, 미중관계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관점에서 후텐마 문제에 접근했지만, 이는 곧 때 이른 기대로 드러났다. 정권교체 직후였던 만큼, 하토야마는 적어도 국내적 추진력을 자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텐마 문제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국 미국의 반응이었다. 후텐마 기지의 이전을 오키나와 내로 한정한다는 계획, 즉 헤노코 안은 과거 자민당정권과 미국 간의 엄연한 합의사항이었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주둔군 없는 미일동맹을 당론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합의과기라는 강수를 두어야만 했던 것이다. 출범 초기 하토야마 내각이 보인 자신감의 이면에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이로 인한 미국의 세계 전략 및 행정책의 변화에 대한 낙관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무성은 곧 후텐마 기지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접근에 불신의 시선을 던졌고, 오바마는 하토야마에게 이를 노골적인 표현하기까지 했다. 결국 작년 12월까지 후텐마 기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하토야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5월까지 그 시한을 연장하면서 여론의 지지율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 천안함 사태는 바로 이 와중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하토야마 내각에 있어 천안함 사건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정책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된 만큼,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외 이전 구상의 폐기는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천안함 사건이 이를 공식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후텐마 기지 현외 이전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미일공동성명이 있던 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서명을 거부한 후쿠시마 소비담당상이 파면되었다. 그는 사민당 당수였다. 하토야마는 연립정권 붕괴를 동반한 ‘결단’을 단행한 것이다. 하토야마가 이처럼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 납치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토착화되어가고

있던 일본 내 반북여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 1면의 머리기사가 되었고, 사진·그래픽 등이 동반된 상세한 분석기사가 연일 게재되었다. 뒤이어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미디어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이즈음부터 하토야마 내각은 이명박 정권과 유사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즉 북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방국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적 자세로 대 북한 강경책을 선도했고, 후텐마 구상의 폐기 또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보인 ‘단호한 결단’이 그간 상처받은 리더십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토야마 내각은 천안함 사태를 퇴진의 계기가 아니라 돌파의 기회로 인식했던 것이다.

Ⅲ. 간 내각의 출범, 동아시아 구상은 후퇴하나

하토야마 내각의 선택은 그 귀결 또한 이명박 정권의 그것과 유사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풍의 효과는 일본에서 정권 유지의 기재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하토야마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한일 양국이 전혀 상이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하토야마는 수상직을 사퇴했고, 오자와 이치로가 당무에서 물러났다. 이들의 동시퇴장을 예상한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토야마와 오자와에 의한 당·정 이중권력구조는 불협화음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지만, 7월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민주당 내 최대계파 소유자이자 선거전의 핵심인물은 오자와였고, 그와 협력적 국정운영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하토야마였기 때문이다. 보다 놀라운 것은 간나오토가 새로운 수상으로 유력해지자, 내각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기 시작한 점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퇴임 직전의 지지율(20%내외)을 3배 이상 증폭시킨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직후 하토야마 내각이 획득했던 지지율에 육박한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28%로 회복돼 자민당 지지율(14%)의 2배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도 예상치 않은 결과였다.

6월 8일 공식출범한 간 내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그 구성에 있어 탈(脫)오자와의 색깔이 분명해졌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율 반등은 바로 하토야마의 리더십과 오자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거부 의사를 민주당 정권이 정면으로 수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의미 있는 쇄신을 지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는 대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각 구성에서 보다

주목할 것은 그 간 후텐마 지지 이전을 추진해 왔던 주체들 즉, 외무상 오카다 카츠야, 방위상 기타자와 도시미, 오키나와 담당 및 국토 교통상 마에하라 세이지, 그리고 국가 공안 납치문제 담당상 나가이 히로시 등 외교안보라인의 거취이다. 이들은 당정의 전면적인 쇄신 속에서도 예외 없이 재임되었다. 후텐마 지지의 오키나와 현의 이전의 꿈은 실패했고, 그 현실가능성도 부정되었지만, 간 내각의 출범으로 그것의 추진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우애외교(友愛外交)라는 하토야마식 슬로건은 사라졌지만, 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기초한 대외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천안함 사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행을 위한 아젠다 설정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간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 중시 외교’를 제시했다. 각론의 작성은 현재진행중일 것이다. 이것의 성공여부는 간 내각이 얼마만큼 안정적인 리더십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일본 내에서 간 내각의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또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총 242석 가운데 121석을 결정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달 이내에 자민당을 비롯한 여타 군소정당이 이를 장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사실 일본정치에 있어 안정적인 리더십의 창출문제는 일본 정치 전체가 당면한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4명의 총리가 연달아서 집권 1년을 못 채우고 자리를 물러나는 광경은 제2차 대전 패전직후의 일본을 연상시킨다. 간 내각의 등장으로 민주당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간 총리가 하토야마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기대 섞인 전망은 당분간 유효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을 규탄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국면으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간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일본정치가 이미 천안함 사태의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한미일이 삼국이 동맹관계가 되어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간 내각의 동아시아 구상에 있어 새로운 정책 실천의 아젠다는 미일 합의에 의한 북일교섭의 재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비약적인 전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거 고이즈미 내각이 단행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로부터 전개되고 있는 상황논리



에 자족하는 동안 간 내각의 동아시아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에게는 ‘고립’ 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간 내각의 한국에 대한 우호정책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반도 정책은 매우 유동적이다.(2010/06/17)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김재관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전남대 교수)

- I. 머리말
- II.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태도와 반응
- III.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
- IV.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 V. 맺음말-전망

I. 머리말

중국에게 참으로 한반도는 말썽 많고 골치 아픈 지역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핵 개발로 동북아 지역을 위태롭게 해왔다면, 남한의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어렵게 이룩한 남북한 긴장완화 분위기를 수포로 돌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남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 진상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오늘 대만 타이베이와 대륙 상하이 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서로 오가는 부러운 ‘하나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주적 국가로 적대시하는 남북한은 참 어리석고 한심한 민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어찌면 같은 분단국가이면서도 중국은 공동번영의 길로 매진하는데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동족을 향한 전쟁 대비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일까? 3월 26일에 서해에서 터진 ‘천안함 사건’은 이런 남북한 냉전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일 수 있다. 분단의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천안함 사건’은 계속 터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분단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듯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 역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21세기 접어들면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책임지는 대국외교’(负责任的大国外交)를 표방해왔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일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에게 긍정적인 개입정책을 불가피하게 구사해왔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6자 회담마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설상가상으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져 중국외교를 한층 더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중국에게 한반도 보다 더 어려운 외교적 시험대는 없을 것이다. 중국정부에게 북한 핵개발 억제와 천안함 사건 처리는 어쩌면 중국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과연 중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 그리고 동 사건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은 무엇인가? 아울러 중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 딜레마와 해결책은 무엇인가? 본 글은 바로 이런 일련의 물음에 대한 추적이다. 본 글은 최근 몇 개월 사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처한 외교적 대응과 정책, 딜레마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태도와 반응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고 난 뒤 지금까지 중국정부의 입장 표명과 대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발발 이후로 천안함 사건 공식 조사결과 발표(5월 20일)가 나오기 전후 시기와 안보리 회부 전후 시기이다.

먼저 사건 발발 이후 조사결과 발표 이전 시기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정부는 초기 즉각적인 논평을 내기보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이후 3주가 경과한 뒤 중국 외교부 4월 20자 공식 외교 정례브리핑에서 장위(姜瑜)대변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불행한 사건이라며 한국정부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문’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측은 한국측이 동 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中方已注意到韩方表示对事件进行科学、客观的调查)는데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측 유관당국이 천안함 침몰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中方相信有关方面能妥善处理韩国“天安舰”沉没的有关问题)고 밝혔다. 이어 4월 27일자 장위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다시 한 번 거듭 4월 20일자 입장을 재천명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전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김정일 방중(5월 3일~6일)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5월 6일자 외교부 브리핑에서 김정일 방중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을 별개의 사안(两码事)임을 분명히 해 분리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민감한 시기의 김정일 방중문제를 중국의 고유한 외교적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처리하고 한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둘째 시기는 5월 20일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이다. 중국측은 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외교부 대변인인 마자오쉬(马朝旭)를 통해 “각국은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적절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各方应冷静克制, 妥善处理有关问题, 避免局势紧张升级)는 전제하에 아울러 “중국측은 일관되게 사

태의 시비곡직에 근거하여 국제적 및 지역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처 처리하며, 또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힘을 쓸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미중 전략경제대화(5.24-25) 직후인 5월 26일에 장즈쥘(张志军)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5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원자바오 총리의 한일 등 동아시아 4개국 순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 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중이며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이것은 원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중국측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장 차관은 “중국은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 이라며, “중국은 공평하게 대처하고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이후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냉정하고 적절하게 본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고 함으로써 일종의 중국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측 조사결과를 수용하기보다 이 같은 명분을 내세워 미국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 시기는 유엔안보리 상정과 맞물리는 때이다. 6월 8~9일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나,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친강(秦刚) 대변인을 통해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中国希望有关当事国会以维护半岛和平与稳定的大局着想, 冷静克制地在安理会处理‘天安’舰事件)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더라도 북한을 특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측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토록 한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가장 역점을 두고 외교적 노력을 시도했지만 허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현재 6월 14일 안보리서 천안함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중국의 기본 원칙과 입장은 변화되지 않았다.

III.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

1. 기본원칙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 기본 원칙과 정책대응을 보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기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아태지역 내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동 지역에서 ‘주변국’에 대한 ‘매력공세’ (charm offensive)을 펼침으로써 미국의 공백을 대체하는 외교효과를 거두었다. 특별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2년 제 2차 북핵위기 이후 6자회담을 주도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왔다. 2002년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는 몇 가지로 재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한체제의 연착륙 지원, 남북한 등거리 균형외교의 추진,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평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제 1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단기적인, 핵심사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었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연착륙 지원이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는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3년 이후 북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왔다. 북한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2.8%에서 2008년에는 73%로 급증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심화되었다.

셋째,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들은 또한 미국과의 협조 없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협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정책목표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전략목표에 수렴되며 이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와 정책에 비춰보았을 때,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대응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교적 딜레마를 수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처리함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원칙은 위에서 언급했던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제 1목표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일 것이다. 이 기본원칙과 목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줄곧 중국이 취한 태도에서 재확인되었다. 즉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말이다. 이런

기본원칙과 목표 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연착륙 그리고 남북한 등거리 균형외교를 추진해오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제1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래 몇 가지 구체적 정책대응이 시도되고 있다고 보인다.

2. 구체적 정책대응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주변 4대강국의 태도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북제재에 찬성 쪽인 미국과 일본을 한축으로 하고 반대쪽인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구도 하에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중국의 대응책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별개 분리(两码事)대응책이다. 그 대표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기를 촉구해왔다. 설령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이 터지더라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틀인 ‘6자회담’의 중요성 때문에 양자를 별개의 문제로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중국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진린뽀(晋林波)는 비록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북중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특히 천안함 사건의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데에서도 이 분리접근법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 사이의 연계를 반대하고 별개의 문제로 처리한 점이다. 5월초 김정일 방중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국내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대북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시점에서 김정일 방중이 전격적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중국이 배신하고 있다는 한국국민들의 분노를 보도했으며 심지어 한국정부가 주한중국대사(張鑫森)를 불러 불만을 제기한데 대해 중국정부는 크게 격노했다. 이 사건은 한중 간에 심각한 외교적 대립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중국 외교주권에 대한 침해였다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중국측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흥분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정부의 대한국 분노를 반영하여 중국의 국제관련 주요 신문사인 <환치우스빠오>(环球时报)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공식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 북한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냉전식 논조로 일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리석은 행위’(愚蠢)이며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해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剑拔弩张) 태도야말로 비이성적인 행위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학자들 가운데서도 천안함 사건 문제와 김정일 방중 문제를 분리시켜 사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인 진찬룡(金

灿荣)교수는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사전에 한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측을 질책하는 것과 관련해 김정일 방중은 북중 양국 사이의 사안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측은 ‘김정일 방중’ 과 ‘천안함 사건’ 을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려고 했다. 하지만 두 사건이 얽히면서 특히 김정일 방중을 둘러싼 한중 간 해프닝은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수준과 한계를 역력히 드러낸 외교적 망신행위가 아니었나싶다. 아울러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둘째, 중립적 대응책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북한과는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그리고 미국과는 ‘책임있는 이익상관자’ 로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등거리 균형정책 유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도 이런 균형정책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중국이 ‘천안함 사건’ 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으로 경사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유지라는 대국적 관점에 기초해서 이 사건을 냉정하고 절제된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 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다.

셋째, ‘책임전가’ 의 대응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일종의 부담기피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역내 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에 기초한 문제해결을 제시함으로써 북한과 한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제해결의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북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측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중러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반대 중러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6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천안함 조사결과 브리핑이 있었지만 제재반대라는 중러 양국의 기본입장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제재반대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로서 몇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 있겠다. 우선 사건관련 제1차 자료를 중국측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고, 다음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 국방 지휘 책임자들의 정보조작과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조치는 중러 양국으로 하여금 한국정부 주도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제재반대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의 NGO인 참여연대에서 ‘천안함 이슈 리포트’ 를 안보리에 제출하여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점이다. 이러한 의혹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중러 양국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러 양국은 한국 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주목하면서 대북제재 반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유엔 대북제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외교전술’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자체 평가에서 비롯된다.

IV. 천안함 사건과 중국외교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외교의 딜레마는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북중동맹 유지의 딜레마,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안정적 미중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첫째, 북중동맹 유지의 딜레마이다. 즉 대북 ‘연루’와 ‘방기’에서 중국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이 촉발요인이 되어 한반도 전쟁발발로 이어진다면 중국의 참전에 따른 연루의 위험성도 증대된다. 이런 연루의 위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때문이다. 군사동맹 성격을 지닌 동 조약의 제2조는 쌍방 간에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게 되면 한쪽은 즉각 군사원조를 해야 한다는 자동개입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약은 양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즉 동 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이 전쟁역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대북 압박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부정적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내 선지루(沈驥如)같은 일부 학자들은 대북 견제용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 위 북중조약을 수정 혹은 파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 핵개발 이후로 ‘북한부담론’이 부상하면서 자동개입조항의 수정·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2006년 10월 10일 외교부대변인 류젠차오의 기자간담회 회의 상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동 조약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2010년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따라서 중국은 아직까지 대북 연루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런 연루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한미일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주요한 동맹자산인 북한을 방기할 경우, 중국의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인 북한을 상실할 위험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게다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돌파구인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대북압박의 강수를 둘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중 동맹 유지의 딜레마이며 천안함 사건에서 중국이 애써 대북제재 반대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대북 추가제재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키거나, 핵개발 명분을 더욱 더 강화시켜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소행 진위 여부를 떠나 정보차단과 조작에 따른 불명확한 조사결과를 빌미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연계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여 2003년부터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한 뒤 2008년에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까지 격상되었다. 이제 양국은 한중FTA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까지 관계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중국은 남북한 두 나라 사이에 균형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듯하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두둔할 수밖에 없기에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출발해 절제와 냉정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런 처사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중국이 대북 지지를 하고 있다는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외교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천안함 사건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의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지만 결과는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중 양국의 발전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실패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대의에 모든 안보현안들을 종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 미중관계 유지의 딜레마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라는 신조어가 나오듯이 미중관계의 급속한 상호의존과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양국은 G2 체제 하 ‘책임있는 이익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이자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은 미중 협조체제(G2) 유지의 중요성과 북한 방위의 위험성 간의 딜레마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필립 제이 크롤리(PJ Crowley) 미국무부 공보차관이 밝혔듯이, 미국은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을 분리 처리한다는 입장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북한제재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를 또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반된 입장과 대립은 향후 ‘G2’ 협조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지입장에 대해 마이클 멀린(Michael Merlin) 미국 합참의장이나 토머스 크리스텐센(Thomas Christensen) 프린스턴 교수와 같은 안보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압박이 필요하며, 중국이 책임있는 글로벌 대국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중협조체제가 순탄치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사건 초기 북한 연루설 부인에서 이후 북한개입설로 입장을 전환한 데 대한 중국의 의혹도 존재하는 것 같다. 서해 지역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첨단 C4ISR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정보의 오류가 존재하는 것일까? 중국이 1차 초기 자료에 대한 공개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미국이 북한개입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서해 지역 내 군사력 투입의 명분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측 우려를 낳게 했다고 본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올 6월말(6월21-24일)에 서해지역 내 군사훈련에 참여한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진린보(晋林波) 연구원은 6월 8일자 <환치우스마오>(环球时报)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겨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미국이 서해에 군사력을 투입할 명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중국에 대한 위협이기에 중국은 냉정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런 우려는 한층 더 중국군의 현대화와 군비 증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해 지역이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의 여파는 향후 G2 협조체제의 균열을 낳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한 천안함 사건을 남북한 문제로 국한시키면서 6자회담이나 미중협조 체제로까지 확장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전망

이번 천안함 사건은 중국외교의 딜레마와 입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건일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제 1차적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응정책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별개 분리대응책, 중립적 대응책, ‘책임전가’의 대

응방식, 대북 제재반대 입장 등을 취했다고 보인다. 이 구체적 대응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외교의 딜레마는 세 차원에서 나타났으나 대체로 북한체제의 보호와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차원의 딜레마는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세력의 대북강경책으로의 선회에 따른 일련의 부정적 파급효과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즉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력’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강화의 명분이 제공되었고, 서해지역마저 미국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다는 우려이다. 그리고 한국 국내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전작권 반환 유예’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남북문제로 국한시키고 6자회담과 별개로 처리하는 태도는 6자회담재개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 재개야말로 동북아 안보현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미중 간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미일이 6자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과연 어느 쪽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효과적인 접근법인가?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 무엇보다 중국측은 만약 그들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한이 소위 제 3의 핵실험 재개와 같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동북아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것 같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나 미국은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라는 극단적 처방 전보다는 의장국 성명 정도 선에서 그치는 현상유지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지더라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근본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 제재반대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의장국 성명 선에서 그치고, 향후 6자회담 재개의 불씨를 살려두는 접근법을 취할 지도 모른다.(2010/06/18)



천안함 사태와 러시아의 정책 대응 분석 및 전망

유진숙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배재대 교수)

- I.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II. 러시아의 동북아 노선
- III. 천안함사태의 해결과 러시아 변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금 동북아 안보 레짐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 관계가 표면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안보리 회부 시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동북아 안보레짐에 대한 어떤 대외 정책적 노선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러시아의 입장은 향후 천안함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I.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 시기부터 한국정부에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러시아의 불만은 일단 서방 국가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의 발표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다는 논조의 대중 매체 기사들에서 단적으로 반영된다. 5월 26일 러시아 대중매체들은 천안함 사태 공식 조사단에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참여했었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 발생원인에 대한 한국측 발표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핵심 대중매체 중의 하나인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에 따르면 한 군 전문가는 “많은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어뢰 표면에 손으로 쓰인 표식을 비

못하여) 국제조사단의 몇 가지 결론은 의심스럽다.” 고 논평했다. “이는 기술적인 결론 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긴밀히 개입하고 있는 미국 외무부의 정치적 결론” 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자적인 조사단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다소 이례적인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관여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다.” 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는 6월 3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냉정함이 요구된다.” 는 공식 논평을 발표하였다.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러시아 조사단은 5월 31일 한국에 입국한 후 별 다른 언론 및 공공 기관과의 접촉 없이 조사 작업을 진행한 이후 6월 7일 러시아로 귀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중매체는 러시아 조사단의 활동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음을 시사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6월 9일 모든 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며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는 7월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6월 8일 이미 러시아의 주요 대중매체들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잠수함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직·간접적인 논평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겸 제1 국방부 부장관 니콜라이 마카로프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천안함 사태를 보도하는 러시아 대중매체들의 논조는 상당히 냉랭하다.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중립적이고 건조하게 사건의 개요와 진행 흐름을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으며 콥소몰스카야 프라브다(KP), 인터팍스, 라시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등 핵심 언론매체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논평을 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주간지인 라시스카야 가제타는 한국정부는 강경한 어조로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기껏해야 “북한이 안했다면 도대체 누가 했겠냐?” 는 식의 빈약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한국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브리핑을 위해 출국하였던 2010년 6월 9일 역시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천안함 사태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상당히 거리를 둔 공식 논평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천안함 사태의 유엔안보리 브리핑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는 유엔안보리를 대상으로 안건을 회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유엔 헌장을 통하여 보장된다.” 는 미온적인 논평을 달았다.

II. 러시아의 동북아 노선

위와 같은 일련의 냉랭하고 미온적인 러시아의 태도는 천안함사태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노선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의 친서구주의적 외교노선의 실패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 대한 견제와 경쟁 노선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러한 공세적 외교노선은 특히 푸틴 전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된 1999년 이후로 전면화 되었으며 이는 핵전력의 강화, 에너지민족주의와 에너지안보의 강화,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복구 시도 등에 반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련하여서도 6자 회담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노선은 특히 지난 제3차 북핵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제3차 북핵 위기 시에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정부의 강력한 대북 비판에 동참하며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 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당시 2009년 4월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전 세계 비핵화 동참 선언’ 과 미국의 폴란드 체코 MD계획의 폐지 및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미사일 설치 계획 수정 등 일련의 화해 무드와 더불어서 미·러 양국 간의 협력적 관계의 강화로 해석되었다. 동시에 러시아의 대북 비판 강화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한·러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러시아의 대북 비판 강화는 동전의 한 면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대북비판이 곧 한국과의 협력 강화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강화된 대북비판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 시킴으로써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며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보레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보여주었던 대북 비판

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다 강력한 미국헤게모니 및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Ⅲ. 천안함사태의 해결과 러시아 변수

러시아가 기본적으로는 친북적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헤게모니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음을 이번 천안함 사태에 임하는 러시아는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러시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군사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영향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러시아를 에너지 및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러시아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에서의 미국헤게모니 견제를 최고의 외교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제1의 외교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미묘한 삐걱거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시화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문제 의결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비토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은 러시아의 외교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가능한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보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06/15)



천안함 사건과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코리아연구원

- I.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 악화
- II. 남북경협 검토
- III. 동북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관계

I. 천안함 사건과 남북관계 악화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남북관계는 치킨게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전하지만 겁쟁이(치킨)소리를 들어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된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사고의 대응으로 5월 24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교역 중단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주요 일간지 칼럼은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했다. 6월 9일 정부가 휴전선 11곳에 대북심리전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 발표하자, 3일 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가한다는 협박으로 응수했다. 상황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우연한 사건이 군사충돌로 번진다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최근 남북관계 악화 원인과 대책을 남북경협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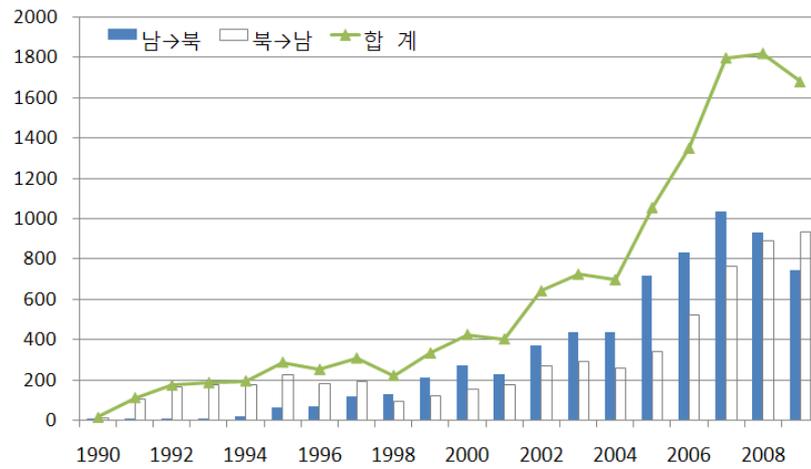
II. 남북경협 검토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북한리스크 감소,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통일비용 감소,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의 목표를 내걸고 남북경협을 추진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는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통일을 모색해 왔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이 필요했다. 하지만 남한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남북경협이 필요 한도 이상 진전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개성공단사업이 북한 내부경제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의 대북투자를 금지했던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남북경협의 진전과 성과에 영향을 미쳐 왔다. 남북경협은 2008년 이전까지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DJ정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남북경협(남북교역) 추이

(백만달러)



그러나 남북경협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대 이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남북경협에 대한 회의를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및 10월 핵실험은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대북지원과 경협이 확대되었음에도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과 핵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 과거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현 정부는 과거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방향을 180도 선회했다.

전쟁과 오랜 남북갈등을 고려하면 아직도 경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까지 나타난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적절한 대응이 아닌 것 같다.

첫째, 남북경협이 축소되면 북한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주가변동을 보면 남북경협과 북한리스크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4~1996년 기간 중 북한의 무력 도발(위협)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단계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1998년 이후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변수의 영향이 커지면서 북한변수의 영향이 줄어든 면도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국제변수의 영향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변수가 주가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경협이 확대(남북관계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군사도발이 생겨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악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주로 기인한다.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주가변동

		D	D+1	D+2	D+5
1994.3.19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	893	-7(-0.8)	-15(-1.7)	-25(-2.8)
1994.6.13	북한, IAEA 공식탈퇴선언	923	-20(-2.1)	-32(-3.5)	19(2.1)
1996.9.18	북한, 강릉 잠수함 침투	782	-9(-1.1)	-23(-2.9)	-4(-0.5)
1998.8.31	북한, 대포동미사일 발사	310	0(0)	4(1.4)	18(5.8)
1999.6.15	서해 연평해전	804	26(3.2)	29(3.6)	72(9.0)
2002.6.29	서해 제2연평해전	743	4(0.5)	11(1.4)	41(5.5)
2003.1.10	북한, NPT 탈퇴선언	628	20(3.1)	22(3.5)	8(1.3)
2006.7.5	북한, 미사일 6발 발사	1,280	-16(-1.2)	-6(-0.5)	17(1.3)
2006.10.9	북한, 1차 핵실험 단행	1,319	9(0.7)	6(0.5)	37(2.8)
2008.12.1	북한, 남북교류 축소조치	1,059	-35(-3.4)	-36(-3.4)	46(4.4)
2009.5.25	북한, 2차 핵실험 단행	1,401	-29(-2.1)	-39(-2.8)	14(1.0)
2010.5.24	남한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경고	1,605	-44(-2.8)	-23(-1.4)	36(2.3)

주: 1) D의 수치는 사건 당일의 주가이며, 나머지 수치는 각각 1일, 2일 후의 주가변동분임
2) ()은 주가변동의 %

둘째, 남북갈등은 북한정부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변화를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교류확대와 그에 따른 정보 확산이 사회주의권의 변화 또는 붕괴의 주된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도 북한정부는 남한소식 또는 황색바람(자본주의 문화)이 유입을 차단하려 노력해 왔다. 그리고 억제수단으로 남북한 갈등을 이용해 왔다. “3일간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목표를 폭격” 같은 소재는 북한정부가 북한주민의 변화 욕구를 잠재우고 북한주민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반면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우리가 지원한 쌀이 ‘대한민국’ 이라 적힌 자루에 담긴 채 팔리고 우리의 연속극과 가요 테이프가 암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남한의 실상이 전달되면서 남한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고 우대를 받고 있다.

물론 남북경협은 양면성을 갖는다. 즉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식량난 및 외화난 등의 경제난을 완화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안정화시키기도 한다. 과거 서독의 동방정책도 비슷했다. 동독정부의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동독주민들이 서방세계를 접하고 그들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독 내에서도 ‘피주기’ 논쟁이 있었고 돈으로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는 것을 ‘인신매매’ 라 비난받기도 했다. 하지만 동

방정책은 동독주민들이 서독과의 통합을 선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셋째, 남북갈등은 통일비용을 늘린다. 북한정부는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서도 개혁개방보다 핵 개발을 선택했다. 최근 북한은 1, 2차 핵실험에 이어 2010년 5월 핵융합기술(수소폭탄 만드는 기술)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개혁개방은 흡수될 가능성을 열지만, 군사력 강화는 정권을 유지시킬 것이란 판단에서이다.

이로써 군사력 격차는 줄었으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커져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동서독의 경제력격차는 3배에 불과했으나 독일은 20년 가까이 통일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독일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금처럼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2003년 영국의 피치사는 통일비용을 2천~5천억달러, 2009년 스탠포드대 피터백 연구원은 2조~5조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피터백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1인당 최소 4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OECD조차 2010년 보고서를 통해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력 격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Ⅲ. 동북아 정세 변화와 향후 남북관계

탈냉전 이후 동북아정세는 크게 변해 왔다. 우선, 한반도의 운명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약소국일 때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최근까지 한반도의 역사가 그러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전쟁의 양상이 군사에서 경제전쟁으로 바뀌고 우리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한반도의 지경학(地經學)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탈냉전과 우리의 국력을 토대로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각축장에서 TKR(한반도중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대륙과 해양세력을 연계하는 경제허브로, 평화의 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불안하고 남북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장기간의 궁핍과 외교적 고립,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권력승계의 문제로 불안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 정도에 대한 평가는 최근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전문가들마다 편차가 다소 크다. 하지만 현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의 위기 정도를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한 것 같다. 이러한 대북인식과 정책이 북한의 호전적 정책과 맞물려 남북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북한 무역(남북교역 제외)의 8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확대

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정책의 중점을 한반도 비핵화에서 안정화로 이행했다. 과거 중국은 미국의 ‘대국책임론’에 호응하여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해 왔다. 하지만 북한 붕괴 후 미국의 다음 타깃이 중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북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북중관계 회복과 북중경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북한의 핵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을 한미군사동맹의 ‘완충지대’로서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 최근 대북정책의 변화 및 동북3성 개발 계획을 들여다보면 고립된 북한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일본·미국과의 무역규모를 합한 것보다 많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남북교역 중단조치는 중국의 북한무역 독점과 남한의 대북한 영향력 상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대북제재로 고립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쟁자가 없는 북한의 자원과 개발 및 이용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북한의 미래는 ‘유일한 생명선’인 중국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향후 중국자본으로 북한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원이 개발되고 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허브와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반도 통일을 일궈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늦기 전에 남북갈등이 누구에게 득과 실로 귀결될지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정세 변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하는 데는 역사적 안목, 인내와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북정책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2010/06/25)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네트워크형 썬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회원등록 및 온라인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